

'전북교육청 교육부와 갈등' 부정적

교육정책 도민 여론조사 결과 발표... 학생안전과 인권·복지 정책은 긍정적 반응

도내 교육정책에 대한 도민 여론 조사 결과, '학생안전과 인권'은 긍정적인 반면에 '교육부와 갈등'은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1일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라북도 교육정책 도민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2년간의 교육 정책에 대한 도민의 평가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전북교육의 방향과 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에서는 매우 잘한다 7%, 잘한다 14.9%, 보통 46%로 나타나 대체로 무난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매우 못한다 11.7%, 못한다 20.4%로 부정적 평가도 32.1%에 이르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교육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다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드러났다.

매우 잘하고 있거나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전주의 경우, 고창, 여성, 40~50대, 자녀가 학생이라는 응답자들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다. 특히,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응답자들이 잘한다는 평가가 전체 잘한다는 평균 21.9%보다 높은 30.3%를 기록했다. 반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자녀가 다닌다는 응답자들은 잘한다는 평가가 전체 평균보다 약 7% 포인트 낮게 나왔다.

반면 못하거나 매우 못한다는 평가는 군산과 익산, 완주와 무진장 지역, 20대, 남성,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가 있다는 응답자가 평균보다 높게 나왔다. 다만, 60대 이상과 자녀가 중학교 다니는 응답자들은 못하다는 평가가 평균보다 10% 포인트 낮게 나왔다.

전북교육청이 추진하는 정책 중에 잘하고 있는 분야로는 학생안전(18.4%)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교육복지(16.1%), 혁신학교(9.4%), 진로교육(7.3%), 참된학력



살피는 민생 지키는 안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김종민 비상대책위 대표가 '살피는 민생, 지키는 안보 20대 국회를 시작합니다'라는 회의실 새로운 배경판을 보고 있다.

(5.3%), 인사정책(4.6%)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세월호 사건 이후 학생안전 정책이 강화되면서 관련 사업에 대해 도민들이 긍정적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교육정책 중 잘하고 있는 분야를 묻는 질문에는 '기타 나 모르겠다'는 응답이 전체의 38.9%를 차지해 우려감을 나타냈다. 도의회는 교육정책에 대해 도민들이 관심이 적다고 할 수 있지만, 교육청 사업이 홍보가 부족하거나, 도민과의 소통미흡 등이 있지는 않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전북교육 정책 중 미흡한 분야로는

27.1%가 교육부와 갈등을 듣고, 다음으로는 누리과정(14.6%), 진로교육(12.7%) 순으로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도의회는 전북교육청이 각종 교육정책 방향을 두고 교육부와 갈등을 빚는 일이 많아지면서, 이를 우려하는 도민들이 늘어난 것으로 해석했다. 앞으로 전북교육이 발전을 위해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정책방향으로는 도민의 29.7%가 학생안전과 학생인권이라 답했다. 이어 참된 학력(20.3%), 교육복지(15.1%), 진로교육(13.3%), 교육부와 갈등해소(9.0%), 누리과정(5.6%)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중학교 자녀를 둔 응답자들은 진로 교육에 대한 기대가 평균보다 약 10% 포

인트 높았으며, 유치원과 어린이집 자녀가 있는 응답자들은 교육복지를 높게 거론했다. 반면 20대와 60대 이상 응답자들은 평균보다 높게 학생안전과 인권을 강조했다. 양용모 교육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해 "전북교육 전반에 대한 도민의 평가가 대체로 긍정적이라 할 수 있지만, 못한다고 평가하는 도민 의견도 30%가 넘는만큼 다각적인 노력과 새로운 교육정책 방향 설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5월 24일부터 3일간 전라북도내 19세 이상 성인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RDD방식 ARS 전화조사를 통해 실시했으며,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는 ±3.7%이다. /신광영 기자



새누리당 전북도당, 국립임실호국원 방문

새누리당 전북도당은 1일 정운천 국회의원(전주)과 도당 주요 당직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립임실호국원을 방문해 선현의 숭고한 넋을 기렸다. 정운천 국회의원은 "국력을 저하시키는 이념적 갈등과 정치이데올로기는 우리 세대에서 하루속히 종식시켜야 한다"며 "호국·보훈의식 및 애국정신을 함양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새누리당 전북도당이 앞장서자"고 했다. /신광영 기자

더민주 도당, 내일 여성 핵심당원 워크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여성위원회는 오는 3일부터 1박2일 동안 원주군 대송한지마을에서 여성 핵심당원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4.13총선결과 평가와 함께 2017 대선승리를 위한 여성당원들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서는 김춘진 도당위원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각 지역위원장, 김갑봉 사무처장, 여성의원, 여성핵심당원, 사무처 당직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첫째날은 국주영은 여성위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안호영 원주·진안·무주·장수 국회의원 격려사, 원주군 군정 설명회와 민생탐방으로 이어진다.

특강은 전병남 전라북도 공예품 전시관 관장이 '전통문화 계승과 콘텐츠 발굴로 전북의 미래를 열자'라는 주제로 강의를 펼치며, 김연희 전북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는 '선거 후 스트레스 치유 및 감정관리'와 '내면에서 나오는 자신감'이란 주제로 힐링강의를 진행한다.

국주영은 여성위원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당의 여성정책과 생활정치 분야에서 여성당원들의 역할을 모색하고 2017 정권교체를 위해 여성당원들의 결의를 모으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신광영 기자

정진석 "경유값 인상 동의 못해"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일 정부가 미세 먼지 대책으로 경유값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한 뒤 "경유값을 올릴 게 아니라 오히려 휘발유값을 내리는 게 옳은 방향"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유값 함은 화물 트럭이나 영세 자영업자 또 30~40대 젊은층, 서민들 부담인데 이를 올리는 방향에 대해서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며 "터무니 없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오히려 국제 시세보다 높게 책정돼 있는 휘발유값을 내리는 게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성주 기자

더민주, 서민주거TF 발족

더불어민주당이 1일 서민주거 태스크포스(TF) 구성을 마무리하고 공식 활동을 들어갔다.

서민주거TF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1차회의를 열고 전월세 문제 등 서민주거문제 해결 방안과 향후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TF단장은 김상희 의원이, 간사는 유동수 의원이 맡기로 했다. 원혜영·조성식·민병두 의원 등 23명이 TF위원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우리 국민들의 고통과 불안 중에 제일 큰 대목이 바로 주거비 부담"이라며 "주거 문제의 해결없이 민생 문제의 해결도 없다는 각오로 TF가 열심히 활동해달라"고 당부했다.

단장을 맡은 김 의원은 "TF위원으로 23명이나 참여했다. 특히 다선 의원이 많이 참여했다"며 "그간 정치권이 하지 못한 숙제를 20대 국회 초반에 하겠다는 의지라고 생각하고, 서민주거 문제에 대해 답을 내놓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TF는 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TF 아래 ▲주거공급 ▲주거안정 ▲주거복지 소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주거공급 소위(위원장 윤관석)는 향후 공공임대주택 확충 및 청년 주거공급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주거안정 소위(위원장 윤호중)는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등 주택임대차 문제에 대한 방안에 집중하고, 주거복지 소위(위원장 이언주)는 정책적 개선 방안 마련을 중점한다는 계획이다.

TF는 향후 주거정책 마련을 위한 강연과 심포지움을 열고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TF는 또 서민주거 대책방안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공공주택특별법·민간임대주택특별법 등을 최우선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더민주는 20대 국회에서 ▲청년일자리TF ▲가계부채TF ▲사교육비절감TF ▲서민주거TF 등 4개의 TF를 구성, 민생현안에 집중기로 했다. 앞서 청년일자리TF와 사교육비절감TF 구성이 완료됐고, 서민주거TF는 세 번째로 꾸러지게 됐다. /이성주 기자

박지원 '의장 자유투표 합의 없었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1일 원구성 협상이 계속 공전될 경우 국회의장 선출을 자유투표로 진행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입장에 대해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합의한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섭입니다'에 출연, 이같이 밝힌 후 "어제 저녁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를 만났는데 왜 뜬금없이 자유투표를 주장했느냐 했더니 박원주 원내수석부대표가 그런 제안을 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원칙적으로 국회의장 선거는 자유투표"라며 "그렇다면 자유투표도 검토해볼만 하다고 했더니 (오히려 우 원내대표가) 화들짝 놀라더라. 그러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안 된다면) 왜 그렇게 제안을 했느냐. 또 국민의당에서도 마치 동조한 것처럼 보도가 나오는데 혼란스럽다. 이런 이야기를 (우 원내대표에게) 했다"고 재차 자유투표에 관해 더민주와 합의한 적이 없음을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다만 "국민의당 일부 지도부에서도 차라리 자유투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며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에서 논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지만 또 새누리당에서 (자유투표는) 절대 반대를 하고 있어 이것도 꼬이고 있다"고 협상 공전의 책임을 새누리당에 돌렸다.

그는 아울러 새누리당이 무소속 당선인들을 부담시켜 제1당 지위를 되찾으려 한다는 전망에 대해 "복합 결정 여부는 새누리당이 결정할 문제"라면서도 "선거 당시 민의는 그대로 존중된다"라고 발언, 새누리당이 복당으로 다시 제1당이 되더라도 원구성 협상에 이를 반영해선 안 된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는 "민약 복당을 시켜서 (이를 근거로) 새누리당이 제1당이라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제2의 3당 합당, 노태우·김영삼·김종필의 합당과 똑같은 민의를 왜곡하는 것"이라며 "실사 새누리당에서 복당(처리)을 한다고 해도 (제당은) 총선 당시의 민의를 기준으로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성주 기자

새누리당 "원 구성 마칠 때까지 복당 없다"

"관례에 따라 국회의장은 여당이 맡아야"

새누리당 원내대표단이 1일 원 구성 협상이 마무리될 때까지 무소속 탈당 의원들에 대한 복당은 없다고 결론내렸다. 무소속 의원들의 복당 문제는 2일 출범될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결정할 사안이지만 정진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대표단이 이같은 방침을 밝힌 만큼, 원 구성 완료 전까지 복당 문제는 사실상 수면아래로 가라앉을 전망이다. 민경욱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 비공개 회의를 마친 후 브리핑을 갖고 "원 구성 협상 전에 복당은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며 "우리 입장에서는 원 구성 협상에 복당이 도움이 안된다"고 말했다. 민 대변인은 이어 "원 구성이 될 때까지는 총선 민심이 반영돼야 한다. 총선에서 만들어주는 게 있는데 복당을 시키면 민의에 반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있게 된다"며 "상임위원장 배분하는 데도 (무소속 의원들이) 들어온다고 해도 '8·8'(상임위원장 배분)이라는 숫자가 변할 리도 없다. 실익이 없는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복당에 대한 최종 결정권이 비대에 있다"는 지적에 대해, "복당 문제는 비대에에서 결정할 문제지만 우리의 입장은

있다"며 "시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원 구성 협상을 하는 주체로서 그 정도 얘기는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정직을 가져오기 위해 복당해야 한다는 것은 야당의 논리"라며 "우리 관례는 여당이 의장을 하는 것이다. 1당이 국회의장을 맡는 것이 관례가 아니다"라며 1당 여부에 상관없이 국회의장직은 여당이 차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개인적으로 원 구성 협상은 4·13 민의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 옳다"며 "복당을 원 구성 협상과 연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성주 기자

당내 활동 조용한 정동영 의중은 무엇일까?

지역 현안 집중... 대권 염두 '뒤통나지기' 분석 제기도

정동영 의원이 부처 짐작하다. 국민의당이 20대 국회에서 존재감을 각인시키고 있지만, 정 의원은 정작 원내 당직에도, 중앙당 당직에도 나서지 않고 침묵을 지키고 있다. 31일 오전 열린 당 정책역량 강화 워크숍에도 참석하지 않은 그는 최근 전북에 머무르며 지역 현안 해결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정 의원은 모 언론사와의 통화에서 "(중앙당·원내에서의 역할은) 소임을 맡은 분들이 잘 하고 계시다"며 "지역 현안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지난 1996년 새정치국민회의 소속으로 전북 전주 덕진에서 출마해 국회에 입성한 이후 이번 총선까지 같은 지역에서 4차례 당선됐다. 그는 그러나 18대 총선에서 서울 동작을, 19대 총선에선 서울 강남을, 2015년

재보선에선 서울 관악에 출마했다가 고배를 마시는 등 부침을 겪었다. 이같은 이력 때문인지, 그는 지난 4·13 총선에서도 접전 끝에 당선됐다. 정 의원은 "전주시민, 전북도민께서 손을 다시 잡아주셨다"며 지역구에서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그가 계속 지역에만 머물 것으로 보는 이는 많지 않다. 그의 전국적 인지도를 감안하면 언제든 보다 큰 꿈을 향해 움직일 것이라 관측이다.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이같은 그의 행보를 두고 '호남 맹주'로서 일단 지지 기반을 단단히 구축하기 위한 1차적 정치행보라고 분석하고 있다. 현재 야권에선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가 유력한 상황이다. 여론에서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떠올랐지만, 호

남 출신 대선 주자는 찾아보기 힘들다. 박지원 원내대표가 대권을 시사하긴 했지만, 이는 실제 대선 과정에서 호남 몫을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읽혔다. 전정배 공동대표는 총선 직후 '호남 주도 정권교체'를 언급하긴 했지만 자신의 행보에 대해서 언급이 없다. 정 의원의 지역구 집중 행보는 국민의당에서 호남 출신 주자로서의 이미지 각인을 위한 움직임이란 분석이다. 다만 정 의원은 언론과의 통화에서 차기 대권 도전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지금 은 얘기할 상황이 아니다"라고만 했다. 정 의원은 1953년생으로 올해 63세이며 내년 대선에는 64세가 된다. 연령으로만 보면 차차기 대선도 가능하다. 이 때문에 내년 초 열린 예정인 전당대회에서 당권을 노릴 것이라 전망도 나온다. /이성주 기자